



미국 : 바이든 정부, 일자리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2023년 3월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대학 학위와 관계없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 그 일환으로 백악관은 학교 학습과 유급 노동경험을 결합한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뿐 아니라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유타 주에서도 대학 학위에 대한 특권을 줄이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바이든 정부의 주장은 그간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취해 온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질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를 지지해 온 인물로서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자는 제안을 하여 공화당으로부터 엘리트층을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데이비드 액셀로드는 “민주당이 스스로 노동자들의 정당이라 자

부해 왔지만 사실 이 당은 대학교육을 받은 이들의 정당이 되어 왔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2008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저교육층 블루칼라 노동자 간의 균열이 심화되었고, 이 균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육체 노동자와 관련이 없거나 이들을 무시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의 경우 민주당 지지 비율이 높았지만, 대학 학위가 없는 이들은 공화당 지지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학력에 따라 극명히 갈리던 지지층을 통합하려는 재선 캠페인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저학력 노동자의 직업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 동시에 도로, 교량,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지출 계획에 포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 The New York Times, “No Degree? No Problem. Biden Tries to Bridge the ‘Diploma Divide.’”, 2023.5.15.

미국 : 의료인력 부족과 인종 간 건강 불평등 문제 지적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에서는 의료부문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¹⁾ 보건자원 및

서비스행정국(HRSA)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추가적으로 1만 7천 명의 1차 진료 인력, 1만 2천



명의 치과 의료인력, 그리고 8,200명의 정신건강 의료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미국의과대학협회는 향후 2034년까지 최대 12만 4천 명에 이르는 의사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인력 부족이 향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주별로 필요한 공중보건 인프라가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역시 (필요한 수 만큼) 갖고 있지 못하다.”라며 더 많은 의료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유색인종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샌더스 의원과 흑인 의과대학 주장들이 나눈 원탁회의에서 샌더스 의원은 미국 인구 중 흑인 비율이 13%를 차지하지만 미국 흑인 의사 비율은 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흑인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에서의 의료 체계 부

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는 흑인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를 더 많이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어하우스 의과대학 총장인 발레리 몽고메리 라이스는 “역사적으로 흑인 의대라 분류되는 4곳 이외에 다른 150여 개 의대 역시 학생의 다양성을 늘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지역 커뮤니티 특성(예, 인종)을 반영하는 의료인력 양성이 건강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색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산모 사망, 만성 질환, 전염병 등의 건강문제가 일어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라이스는 “접근성 부족 등과 함께 인종차별과 무의식적 편견 역시 유색인종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유색인종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1) CNN, “Concern Grows around US Health-care Workforce Shortage: ‘We Don’t Have Enough Doctors’”, 2023.5.16.

미국 : 임금인상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작가조합의 대규모 파업¹⁾²⁾

미국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갈등이 치솟고 있다. 미국 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 WGA)에 소속된 무려 1만 1천 명이 넘는 작가들이 15년 만에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WGA는 업계 사용자대표 단체인 모션 픽처 및 TV 프로듀서 연맹(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과 2020년의 단체교섭 이후 재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뉴욕과 할리우드의 미디어 회사들이 콘텐츠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14만 2,800명의 작가들의 중위임금은 연간 6만 9,510달러이다. WGA의 분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추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사실상 최

근 몇 년간 중위소득이 23% 감소한 것과 다름이 없다. WGA는 임금 5~6%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들은 2~4%를 제시하고 있다. 얼핏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연간 인플레이션과 일반적인 생활비 증가를 고려해보면 이는 중요한 간극이다. 한편 작가들은 충분한 임금인상 없이는 더 이상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WGA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 미디어 제작의 경우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과 같은 스트리밍 업체로 넘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드라마의 한 시즌 편수는 20회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그 분량이 보통 8회에서 12회 사이이다. 즉 제작 드라마의 편수가 줄어들면서 작가들의 소득 또한 감소했다. 또

한 WGA는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이윤이 작가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은 노동기간의 연장 및 전반적인 일자리 안정성 제고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제작사는 작가들을 매우 단기간으로 고용하면서 전속계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작가들은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그다음 일 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토크쇼 및 생방송 프로그램들이다. 지미 키멜 라이브, SNL 역시 작가 파업에 따라 기존 방영분을 재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리밍 업체들은 기존 방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경제적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된다.

1) Forbes, "WGA Strike: Breaking Down The Fight", 2023.5.29.

2) The Washington Post, "Why Over 11,000 TV and Movie Writers are Striking and the Shows Affected", 2023.5.2.

미국 : 철강노조, 전기버스 회사 노조 조직화¹⁾

미국 조지아 주 포트 밸리에 있는 블루버드의 노동자들이 미국 철강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결과는 697 대 435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공장에서 실시된 첫 번째 노조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FL-CIO의 리즈 쉐러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전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블루버드는 바이든의 인프라 법을 통해 5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표적인 미국 산업 정책의 수혜 기업이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책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산업체에 친노동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가령 환경보호국은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기업들에 건강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노조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



는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철강노조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 역시 이에 큰 기여를 했다. 조지아 주의 두 민주당 상원과 조지아 남서부의 민주당 하원들은 노조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블루버드의 경영진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

해 여러 가지 전략을 취했다. 그중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을 위주로 고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블루버드의 줄리엔 바클레이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대해 “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노조가 회사와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을 캠페인 동안 줄곧 내비쳤다.

1) The New York Times, “Flush With Federal Money, Strings Attached, a Deep South Factory Votes to Unionize”, 2023.5.15.

독일 : 4월 물가상승률 7.2% 기록, 두 달 연속 8% 이하에 머물러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4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7.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8% 이하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DIW 독일경제연구소의 케어스틴 버노스 박사는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이미 최고점을 지나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하나 곧바로 물가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만큼 시민들은 이제 현재의 물가에 적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²⁾

최근 설문조사기관 YouGov에서 약 3천 명의 시민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30%의 응답자가 현재의 임금이 생활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가정의 월 세후임금이 2,500유로보다 낮은 그룹에서 현재의 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43%에 달했다. 또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총 53.6%의 응답자가 추후 12개월 내 임금협등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현재 임금이 생활비 조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도 약 43.6%가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³⁾

- 1)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평균 17.2%가 상승했다.
- 2) Tagesspiegel, “Müssen uns an Preise gewöhnen: Wirtschaftsforscher sehen Trendwende bei Inflation, aber keinen Rückgang”, 2023.5.18.
- 3) Frankfurter Rundschau, “Inflation: Bei jedem dritten Deutschen reicht der Netto-Lohn nicht mehr”, 2023.5.17.

독일 : 중증장애인 미고용 시 기업 부담금 2배 인상하기로

사회법전 제4권 제154조는 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기업에서 이 중 최소 5%를 중증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독일 내 약 17만 5천 개의 기업이 이 법 조항에 의해 중증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연방노동청의 조사에 의하면 법정 고용비율을 지키는 기업은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약 4분의 1의 사용자는 중증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정부는 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금을 인상하고자 한다. 현재 기업은 의무고용 미달 시 해당 일자리당 360유로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부담금이 720유로로 두 배 인상된다. 해당 안은 시민단체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사용자연합(BDA)으로부터는 반대에 부딪혔다. 사용자들은 3년째 계속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후보가 없어 고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기업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장관은 노동인력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중증장애인을 편입시키는 것은 사회적 참여와 정의를 떠나 경제적 이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부담금의 인상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중증장애인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고 숙련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개정 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¹⁾

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Bundesrat stimmt für Gesetz der Inklusion am Arbeitsmarkt zu", 2023.5.12.

영국 : 잠재적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피해자 수 증가에 정부 경고

영국 내 잠재적 현대판 노예제 희생자 수가 2022년 대비 최고치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영국 내무부에 신고된 잠재적 노동착취 피해자는 4,746명으로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분의 1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¹⁾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시스템

인 NRM(National Referral Mechanism)이라는 핫라인을 통해 범죄 현황이 매년 영국 내무부에 보고된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NRM에 신고된 피해자 수 역시 시스템이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해당 수치는 2022년 1분기에 비해 27%, 2022년 10~12월 기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이



다.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로 인한 노동착취 피해자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피해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노동착취 피해자들은 건설, 농업, 서비스업, 성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네일아트 숍, 세차장, 대마초 농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²⁾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인 Unseen에 따르면 노동착취 상담전화 건수가 급증하였고 특히 요양원, 개인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피해자 수도 격증했다. 또한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피해 또한 늘어났다.³⁾

현재 영국 상원에서는 불법이주 법안을 수정하고자 한다. 이를 두고 영국 정부, 의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불법이주를 방지하고 억제”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인권단체, 테리사 메이를 포함한 원로 의원들, 그리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

다. 해당 수정법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동착취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 내 많은 인신매매, 노동착취 피해자들은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불법이주를 시도한 외국인들이다. 리시 수낙 총리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단속을 위한 국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영국 내무부 수엘라 브레이버만 장관은 상원의 수정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내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소형보트를 통해 영국에 들어오고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정당화할 “타당한 이유”는 없으며,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착취 피해자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착취 피해자로 허위 등록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 강제노동 착취에 대한 의견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⁴⁾

- 1) 2022년 1분기 NRM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3,773명이었다.
- 2) The Guardian, “Number of Potential Modern Slavery Victims in England and Wales Hits Record High”, 2023.5.4.
- 3) Big Issue, “Reports of Forced Labour, Sex Trafficking and Domestic Servitude at Record High in Britain”, 2023.5.16.
- 4) Independent, “Rishi Sunak Says International System for Policing Human Trafficking ‘Not Working’”, 2023.5.17.

영국 : 통신사 BT 그룹, 대규모 해고계획 발표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기업 BT 그룹이 2030년까지 인력을 4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BT 그룹 내 약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며 이 중 약 1만 개의 일자리는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현재 BT 그룹은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한다. BT 그룹 필립 안센 최고 경영자는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이 끝나면 늦어도 2030년까지 직원 수를 13만 명에서 7만 5천~9만 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원 축소

현상은 BT 그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BT 그룹의 경쟁사인 보다폰(Vodafone) 통신사도 자사 경쟁력 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해 약 1만 1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BT 그룹 회장은 해당 인원 감축이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될 것이며 노조와 협력해 인원 감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¹⁾²⁾

- 1) AP News, “UK Telecom Company BT Plans to Shed Up to 55,000 Jobs, Replace Some with AI”, 2023.5.19.
- 2) The Economic Times, “Britain's BT Group to Lay Off Up to 55,000 by 2030 After Fibre Roll-out Ends”, 2023.5.18.

프랑스 : 2023년 1분기 실업률, 7.1%로 안정세 유지¹⁾

국립통계청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3년 1분기 실업률은 7.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²⁾ 국제노동기구 기준 2023년 1분기 실업자 수는 2022년 4분기에 비해 7천 명가량 소폭 감소해 약 220만 명으로 집계됐고,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당시 관찰됐던 임시적인 하락세를 제외한다면, 2008년 1분기 7.2%, 1982년 2분기 7.1%와 유사한 수치다.³⁾ 한편 2023년 1분기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022년 4분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6.6%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말 보건위기 이전 수준보다 5.2포인트 낮게 측정됐다. 25~49세 실업률은 6.4%로 거의 안정적이었으며, 2022년 4분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50세 이상 실업률은 0.2포인트 소폭 반등한 5.2%로, 2022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소 1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실직자의 장기 실업률은 총 경제활동인구의 1.8%로, 2023년 1분기 동안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수치는 2020년 2분기(1.4%)를 제외하면 2009년 1분기(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1) Le Monde, “Taux de chômage stable, à 7,1 %, au premier trimestre en France, selon l’Insee”, 2023.5.17.
- 2)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Au premier trimestre 2023, le taux de chômage est stable à 7,1%”, 2023.5.17.
- 3) Le Figaro, “En France, le taux de chômage stable, à 7,1%, au premier trimestre”, 2023.5.17.



프랑스 : 55~69세 국민 16%, 노동소득도 연금수당도 받지 못한다¹⁾

2023년 5월 11일, 국립통계청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중 취업도 은퇴도 하지 않은 55~69세 고령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 증가해 2021년 기준 16%에 달했다고 밝혔다.²⁾ 해당 연령층의 국민은 2021년에 노동소득도 연금수당도 수령하지 못했고, 2014년과 비교하면 2% 증가한 수치다. 연구에 참여한 엘리에트 카스틀랑 국립통계청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2010년 11월 법정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변경한 내용과 2014년 1월 사회보장 지출기간을 연장한 내용에 주목했다. 이러한 개혁의 영향으로 고령 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할 수

있었지만, 퇴직자 비율의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연금수당도 노동소득도 없는 국민 비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55~61세 사이의 국민 중 19%는 구직 중인 실업자이며 45%는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비율의 59%가 여성으로 집계됐고, 특히 학위가 없는 자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취업도 은퇴도 하지 않은 국민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2021년 55세의 경우에는 20%, 61세의 경우 28%였으며, 62세는 17%, 69세는 3%로 노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감소했다.³⁾

- 1) Le Monde, “De plus en plus de seniors dans un “sas de précarité””, 2023.5.12.
- 2)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En 2021, une personne de 55 à 69 ans sur six ni en emploi ni à la retraite, une situation le plus souvent subie”, 2023.5.11.
- 3) Franceinfo, “Seniors : 16% des personnes âgées de 55 à 69 ans ne sont ni en emploi, ni à la retraite, selon l'Insee”, 2023.5.11.

프랑스 : “100% 사회진출” 목표로 직업계 고등학교 시스템 개혁에 박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3년 5월 4일 “오늘날 직업계 고등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누적”된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연간 10억 유로를 투입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개혁안 방향을 제시했다.¹⁾ 이번 제 제안된 취직을 통한 사회진출(insertion professionnelle) 향상 개혁안은 학업중단 방지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 등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취업률이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반면 지역 노동시장 현황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을 수월하게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직업계 고등학교와

기업 간의 관계 강화, 고등학교 실습생(stagiaire)에 대한 보수 지급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또한 학업중단 방지 차원에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학

기가 시작되는 2023년 9월부터 한국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5학년부터 직업탐방 교육이 진행된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에 방문해 각종 직업에 대한 소개와 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신학기부터 월 세후 100유로에서 230유로가량 임금을 상승한다고 밝혔다.

1) Franceinfo, “Réforme du lycée professionnel : ce qu’il faut retenir des annonces d’Emmanuel Macron”, 2023.5.4.

프랑스 : 정부, 재산업화(réindustrialisation)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가속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5월 11일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재산업화 방향을 발표하며 이것이 프랑스의 미래를 위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7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300개의 신규 생산시설을 프랑스 전역에 확보하며, 그중 9만 개의 일자리를 산업분야에서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재산업화 전략에서 중심이 되는 방향은 “탈탄소 산업(industrie décarbonnée)”과 혁신산업 육성이다. 특히 마크롱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호가 전 지구적인 안건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산업, 농업 그리고 농산물 가공업 등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윤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양자물리학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혁신 기술을 활용해 제품생산 등에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3년 5월 16일 내각 회의에서 “녹색산업” 법안을 마련했다.²⁾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녹색산업 조세감면(crédit d’impôt industrie verte)”의 도입이다. 연간 5억 유로, 총 2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정책은 풍력 및 태양열 패널, 또는 열 펌프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체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30억 유로 상당의 투자와 4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1) Elysée(2023), “Accélérer notre réindustrialisation : le Président présente sa stratégie”, <https://www.elysee.fr/> (2023.5.19).

2) BFM TV, “Délais raccourcis, crédit d’impôt, bonus écologique… Ce que contient le projet ‘industrie verte’”, 2023.5.16.

스페인 : 2022년 기준 빈곤지수(AROPE) 감소

2023년 4월 24일, 스페인 통계청(INE)이 발표한 빈곤지수(AROPE)¹⁾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의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인구는 2022년 기준 26%로 전년도 27.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위험에 처한 인구는 21.7%에서 20.4%로 감소했으며, 심각한 물질적 빈곤에 처한 인구는 8.3%에서 0.6%p 감소한 7.7%를 기록했다. 또한 극심한 노동강도에 처해 있는 인구는 11.6%에서 8.6%로 감소했으며, 월말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는 8.8%에서 8.7%로 미미하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²⁾

지역별로 보자면 AROPE 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주는 엑스트레마두라 주(36.9%), 발레아레스 제도(36.2%), 그리고 안달루시아 주(35.8%)로 나타

났다. 빈곤위험도가 가장 낮은 자치주는 나바라 주(14.5%)와 바스크 지방(15.7%)이며, 마드리드 자치주와 카탈루냐 자치주는 각각 20.3%, 20.4%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로 보자면 16세 미만 남성의 32.8%와 여성의 31.6%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6세부터 29세 사이의 남성(26.8%)과 여성(27.9%), 30세부터 44세 사이의 남성(23.1%)과 여성(26.5%), 45세부터 64세까지 남성(24.5%)과 여성(27.8%),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18.6%, 23.4%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한편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전인 2021년 소득 정보를 토대로 계산했다는 맹점이 있다.

1) AROPE(At Risk of Poverty and/or Exclusion) 지수란 빈곤 현황을 살피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지표로 중위소득 60% 미만 또는 물질적으로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거나 심한 노동강도에 처해 있는 인구가 빈곤층에 해당한다.

2) Cadena Ser, "Dos de cada diez españoles están en riesgo de pobreza, según el INE", 2023.4.24.

3)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ine.es/dyngs/ODS/es/indicador.htm?id=4837>

스페인 : 2025년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임금인상 추진 합의

스페인의 양대 노총(CCOO와 UGT)과 양대 사용자단체인 기업연합회(CEOE) 및 중소기업연합회(CEPYME)가 5월 10일에 고용협약과 단체교섭(AENC) 회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10% 인상하기로 권고하는 협약

에 합의했다.¹⁾

합의된 인상안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4%, 3%, 3% 인상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임금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연간 1%를 인상할 계획이

다. 2026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임금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연간 1%를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2025년까지의 임금인상률은 정해진 반면에 2026년의 정확한 임금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EO의 안토니오 가라멘디 회장은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음을 강조했으며, CEPYME의 헤라르도 쿠에르바 회장 역시 이 합의가 스페인 경제와 중소기업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UGT의 페페 알바레스 사무총장과 CCOO의 우나이 소르도 사무총장 역시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노사 사이에 노동환경의 디지털화와 고용불안정의 문제 또한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이 합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측 구성원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1) RTVE, "Patronal y sindicatos firman el nuevo acuerdo salarial hasta 2025: "Es un pacto a favor de todos"", 2023.5.10.

일본 : 온라인 면접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확대

일본 후생노동성은 실업급여 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온라인 면접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¹⁾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거친 후 4주마다 같은 방식으로 노동의지와 능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도서지역 거주자는 고용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1월부터 도서지역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이나 자택에서의 온라인 면접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²⁾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올여름부터는 온라인 면접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면접이 허용되는 주요 대상은 아동 양육자나 난치병 환자 등 고용센터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이며, 대상 지역으로는 도쿄, 오사카, 아이치 등 일본 내 9개 광역도시다.³⁾ 또한 조기 재취업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인 실업자는 고용센터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시 대면면접을 생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⁴⁾ 후생노동성은 온라인으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한 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면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⁵⁾

1) 中部経済新聞, 「失業給付手続き、オンライン拡大 厚労省」, 2023.5.16.

2) 時事通信, 「育児中の人もオンラインで 失業認定面談—厚労省」, 2023.5.15.



- 3) 毎日新聞, 「失業給付のオンライン面談拡大 遠隔地の育児中の人や難病患者ら」, 2023.5.16.
- 4) NHK, 「失業給付の面談 オンライン化拡大へ 子育て中の人など対象」, 2023.5.12.
- 5) NHK, 「失業給付受け取りに必要な面談 オンライン化拡大へ 厚労省」, 2023.5.15.

일본 : 재교육 지원 강화, 노동이동 촉진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지침 마련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¹⁾ 지침의 목적은 노동자의 구조적 임금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산업 분야로의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다.²⁾

첫째, 기존에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일,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한 실업자는 그 기간이 2~3개월이었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완화해, 자발적 퇴사자도 재교육에 참여하면 7일 만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이직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둘째, 노동자가 더 쉽게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셋째,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

급하는 휴업수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해, 휴업수당 수급기간이 30일을 초과한 노동자가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낮추어 노동자의 적극적인 재교육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넷째, 연간 40만 엔인 퇴직급여 과세 공제액이 20년 근속 시점부터 연간 70만 엔으로 늘어나는 현행 소득세 경감 제도가 노동이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2023년 말까지 전국 평균 최저시급을 1천 엔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³⁾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⁴⁾

- 1) 日テレNEWS, 「日本企業と外国企業の賃金格差縮小を…政府が「労働市場改革」指針案とりまとめ “新しい資本主義”の重要ポイント」, 2023.5.16.
- 2) 読売新聞, 「雇用調整助成金を見直し、リスクリング支援へ…失業給付は7日に短縮」, 2023.5.16.
- 3) NHK, 「リスクリング支援強化など 労働市場改革の指針まとまる 政府」, 2023.5.16.
- 4) 時事通信, 「雇調金、学び直し原則化 労働市場改革で指針—新しい資本主義会議」, 2023.5.16.